

노동자 배신감 증대와 우파 공세 사이에서

문재인 중도정치의 위기 시작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격에 물러서지
말고 맞서야

2, 4, 12면

장기 불황과
양극화, 좌파의
과제

6~7면

KT 노동자가 말하는
“통신 대란”의
진정한 이유

2면

사립유치원 비리와
‘박용진 3법’

5면

여아의
이재명·박원순
공격 짝짜꿍

3면

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8~10면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화염병 공격과 특별재판부

3면

KT 노동자가 말한다, ‘통신 대란’의 진정한 이유

민영화와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재난

이원준 KT전국민주동지회 회원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등 서울 북서부 권역에 ‘통신 대란’이 일어났다. 해당 지역의 KT 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IPTV 등이 마비된 것이다. KT통신망을 주로 이용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도 먹통이 됐다.

통신 사고는 단지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안전과 직결돼 있다. 해당 지역의 KT통신망 이용자들은 한동안 모든 종류의 통신이 차단된 상태로 지내야 했다. 그래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보낸 재난 안내 문자도 못 받았다. 서대문과 용산의 112 통신 시스템도 마비됐고, KT회선을 이용하는 병원 전산망도 장애를 일으켰다.

이번 사고가 지진, 화재, 태풍 등 다른 재난과 함께 발생했다면 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통신구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통신 대란’으로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민영화가 있다. KT는 민영화 이후 수익성 논리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

KT는 비용을 줄이겠다며, 개별 국사(전화국)별로 분산돼 있던 기존 통신 시설을 소수의 집중국으로 모았다. 그렇게 하면 유휴 공간이 확보된 전화국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인력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현국사는 서울 지역 KT통신망의 중간 허브 구실을 하는 곳으로 여러 지역의 화선들이 집중돼 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이다.

비용 절감에 급급했던 KT는 통신 사고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다. 이번 사고 당시 근무자는 단 2명뿐이었다고 한다. 아현지점을 폐지하면서 상주 인원을 철수시켰기 때문이다.



통신 사고가 재난과 함께 발생하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하 통신구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설비도 없었다. 케이블 설치 등 핵심 업무를 외주화한 것도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했다.

장애 발생시 복구 작업을 위해 통신 회선을 우회할 수 있는 이원화 체계가 없었던 것도 피해를 키웠다. 정부는 아현국사를 D등급 통신 시설로 분류하는데, A~C등급과는 달리 D등급은 통신회선 이원화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화재 발생 이틀 뒤 오성목 KT네트

워크부문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D등급까지 이원화하려면 ... 대규모 토목공사와 광케이블 포석 작업이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비용인 것이다.

KT는 비용을 아끼려고 등급 규정을 일부러 어겼을 수도 있다. 회선이 분산돼 있던 시기에 설정한 등급을 회선을 집중시킨 이후에도 유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민영화와 자본주의

이번 ‘통신 대란’은 KT 민영화의 폐해를 드러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통신 안정성에서 중요한 요소인 설비 투자액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2000년 33.9퍼센트이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은 2004년에는 15.3퍼센트로 줄었고, 현재는 10퍼센트 이하다.

그 문제점은 곧 드러났다. 2005년

2월 경기남부·영남지역에서 대량의 전화 불통 사태가 벌어졌는데, 설비투자가 줄면서 교환기 여유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비용 절감을 앞세운 인력 구조조정도 거둬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 황창규 회장이 취임 직후 강제 ‘ 명예퇴직’으로 8300여 명을 쫓아낸 일이다. 6만여 명이던 직원이 2만 3000여 명으로 줄었다. 인터넷 개통과 수리, 케이블 설치, 콜센터 등 핵심 업무들은 외주화됐다.

그렇게 생겨난 수익은 KT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자본에게 돌아갔고 피해는 노동자와 서민의 몫이 됐다. KT 민영화의 폐해를 제대로 돌아보고 재국유화 같은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더 근본에서 비용 절감에 집착하고 수익성을 쫓는 KT의 행태는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대중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다. 자본가들의 이윤 경쟁이 자본주의의 핵심 동학이다.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수익성 경쟁, 비용 절감 경쟁을 벌인다. 그런 경쟁 속에서 노동계급의 안전은 우선 순위에서 쉽게 밀려난다. 세월호 참사부터 최근의 종로 고시원 화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복되는 참사를 통해 수없이 이를 확인해 왔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잔인한 우선순위는 통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4년 3월 종로 통신구, 11월 대구 통신구, 2000년 2월 여의도의 전기·통신 공동구에서 불이 나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2003년에는 DNS서버가 다운돼 인터넷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거둬되는 ‘통신 대란’을 막으려면 민영화 반대·재국유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한 한편, 그 운동이 근본적으로 이윤 중심 체제에 대한 도전과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11월 9일 문재인이 경제 수장들을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인정받는 정통 경제 관료”다(《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 매경출판).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거의 내리 경제 관료를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의 정책 보좌관이었다. 이 자는 한미FTA, 비정규직 확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기획재정부 대변인 등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참가했고, 박근혜가 탄핵될 때까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했다. 그야말로 홍남기는 역대 정부들의 친기업, 노동 착취,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실행한 성실한 일꾼이었다.

홍남기는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각별히 경청하겠다”며 매주 수요일 기업인들과 오찬 미팅을 하겠다고도 했다. 경제 성장(자본 축적)을 위해 “구조개혁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해고 등 노동 비용을 절감해 기업주의 이윤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수

현은 이런 홍남기를 “뒤통만하겠다”고 했다. 전임 정책실장 장하성은 말로는 김동연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실천에서는 쫓다 뺏기 식 최저임금 개악, 규제프리존법 통과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김수현은 말로도 경제 관료와 충돌하지 않겠다.

개혁 배신의 아이콘

김수현 임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인사라고 평가한다. 잘못된 해석이다. 김수현은 빈민운동 출신이지만, 오래 전에 과거 민주당 정부에 들어가 ‘개혁 배신의 아이콘’이라 할 만한 일을 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수현은 사회

수석비서관을 하며 온갖 개혁 배신에 책임이 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탈핵 공약 폐기 등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특히 김수현은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데,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 김수현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을 만든 장본인이다.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산세 인상 등 보유세 인상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한나라당과 부자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했다.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대량 확대 등은 추진하지 않았다. 결국 집값을 잡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우파와 시장에 타협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그런데 김수현은 교훈을 거꾸로 이끌어 냈다.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같은 “위험한 개혁”(《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저)에는 더욱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됐고,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친시장적 방향이 강화됐다.

김수현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너무 “보수화”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수장 임명은 정부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신호다.

정선영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11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반을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주요 대상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정황과 증언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검사의 의견과 달리 검찰 상부에서 무혐의 처리했기에 현재 논란 중인 사건이다. 국정 조사가 자연스러워 보인다(그 효과는 별 문제로 하고).

그러나 서울시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은 생뚱맞다. 자유한국당이 그저 국정감사 기간에 일방적으로 폭로했을 뿐, 그 비리 의혹의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우파 야당들과 우파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각별히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을 '귀족노조'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보인다.

공교롭게도 때마침 문재인이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노총 불참을 '안타까워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이 대통령의 민주노총 비난에 가세했다.

우파 야당들의 국정조사 합의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그의 개혁의 충분성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최근 우파 야당들은 일제히 박원순



여야가 합작해 “(좌파)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들은 박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개악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고 비난한다.(박 시장의 소속 정당인 여당은 그를 방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망신당하는 것에 견주면 박 시장이 받는 비난은 양반이다. 검찰과 경찰, 우파 언론과 친민주당 성향의 중도진보 언론들이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핍박하고 있다.

11월 27일에는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를

사용했는지 모르는 옛 핸드폰을 찾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태도도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지사는 엄청난 사퇴 압박을 받을 것이다. 사실상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애초 이 트위터(“정의를 위하여”)가 고발된 핵심 이유는 노무현, 문재인, 전태일 등을 비방했다는 극히 사소한 이유다. 이런 걸 뒤지는 게 진정한 개혁에 필요한 정치인 검증일까?

그 외 혐의들도 모두 개혁 공약과 실천 여부와 무관한 개인 가정사들이다. 이재명 지사가 최근 주장한 기본소득형 국도보유세 같은 정책에 대한 토론

은 없다.

여기에는 경제 위기 심화와 그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부진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을 미리 견제하려는 모든 지배자들의 의도가 있다.

노동자 투쟁에 자칫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는 인사들 공격에는 기성 정치세력들이 합심한다.

박원순 시장이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집회에 참석해 노조 지지 발언을 했다고 비난받는 이유다. 이재명 지사는 최저임금제 개악에 반대했고, 최근에는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정책 협의를 하고, 거기서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고도 밝혔다.

두 인사 모두 계급 불평등 정책과 재벌 우대 등에 분노하는 촛불 정서를 대변하는 언행으로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 지사는 민주당 주류나 문재인과는 달리 서민층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어 지배자들이 더 위협하게 여기는 듯하다.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개악에 대해 이 지사의 기반인 노동자·서민층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지층의 압력을 받아 만약 이 지사가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하면 여권 내부의 개악 동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기업주들의 이익에도 해가 된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박 시장과 이 지사에 대한 공세에 우파 야당들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도 연일 박 시장을 공격하고 있다.

11월 28일에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최고위원회 산하에 설치했다. 이 결정을 한 회의에서 원내대표 김관영은 이 지사와 박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추긴다며 비난했다.

여야가 합작해 “(좌파)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여야가 합작으로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도파 정부가 “포퓰리즘의 위협”을 제거해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회 협치 바깥의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좌파가 이런 책략을 폭로하고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김문성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정문에서 한 남성이 대법원장(김명수)이 탄 차량에 화염병(플라스틱병)을 던졌다.

대법원에서 파소한 뒤,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항의 방법에 동의하긴 어려워도 그의 심정에는 100퍼센트 공감이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격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국가서열 3위인 대법원장이 대낮에 그것도 대법원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에 지배계급은 충격을 받았겠지만 말이다.

최근 드러난 사법 농단 실체와 이를 대하는 현 법원의 태도가 이런 불신과 분노에 불을 지른 듯하다.

사법 농단의 알맹이를 이루는 재판 거래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나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에 이의를 제기한노동자, 서민 등 ‘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것들이었다.

이런 부정의는 일부의 일탈도 아니고 대법원장 지휘 아래 법원 내 기구들이

공식 계선을 통해서 저지른 일들이다.

무엇보다, 현 법원은 사과와 시정 노력은커녕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문제 판사들을 감쌌다.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연이어 기각하며 수사까지 방해했다.

그런데도 11월 27일 대법원은 여드레 전 법관회의가 결의한 문제 판사 탄핵 촉구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이 지명한 새 대법원장 김명수는 최근 관련 판사 13명을 법원 내 법관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아마 법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테니 법원 권력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인 듯하다.

그러나 사법 농단의 실무 지휘자로 지목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 농단 연루 의혹 판사는 총 93명이다. 이 중 대법관만 10명이고 이들을 포함해 차관급 이상 판사가 34명이나 된다.

상황이 이러니, 힘없는 자신이 뒷거래나 하면서 특권층 뒤를 봐 주는 판사들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진다면 누

군들 원한을 품지 않겠는가?

지금의 제도라면 사법 농단 재판이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분노와 냉소가 정당할 이유다. 현 법원이 사법 농단 부역 판사들을 감싸기하면서 그들과 한 식구임을 공표한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 농단을 다룰 재판에서 기존 방법대로 재판부를 선정하지 말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법치주의의 확립?

물론 법원은 국회 입법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3권 분립 위반이라고 반대한다. 그러나 이는 3권 분립을 넘나들며 의도적으로 계급적 판결을 한 자들이 할 말은 아니다.

3권 분립이 정의의 수호신도 아니다. 법원의 사법 농단 옹호가 바로 3권 분립을 이용해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낸 민주당도 이를 진지하게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중진 박영선은 11월 26일 인터뷰에서 법관 탄핵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모두 검찰 기소 후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기소는 특정 판사들을 범죄 혐의로 지목해 재판으로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기소 후에 기소만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결국 어찌 보면, 재판을 받은 뒤에야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능하다는 순환논법이요 말장난인 셈이다.

검찰 수사를 대체하는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가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이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실제 효과가 있을지와는 별개로).

미적지근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특별재판부와 법관 탄핵을 반대하는 우파 야당들도 모두 법원의 ‘신뢰 회복’을 말한다. 법치주의의 보루로 다시 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 농단 재판들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내세운 농단 아니었던가?

박근혜 탄핵과 그 일당의 구속 등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를 잡는 듯 보였으나 금세 불신을 사고 불안정해지고 있다. 경제 위기와 노동계급의 저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전 정권의 적폐인데도 문재인이 쪼뼛매는 것이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서도(심지어 특별재판부가 도입돼도) 대중이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해 보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최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대중의 여론이 그 자체로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압력이 되고 있지만 말이다.

사법 농단 심판과 적폐 청산 문제는 법치주의의 재확립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멈췄다 최근에는 재개된 계급투쟁이 더한층 강화되는 것이 본질적 문제인 것이다.

김문성

이렇게 생각한다

친시장·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자

11월 21일 전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만여 명이 파업 집회를 가졌다. 서울에서 6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지 열흘 만이었다. 이날 파업에는 16만 명이 참가했다. 12만 8천 명이 참가한 금속노조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배신감·분노가 쌓인 결과다. 배제와 저임금 고착과 자회사 전성시대로 전락한 정규직 전환 정책,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광주형 일자리 추진, 기업들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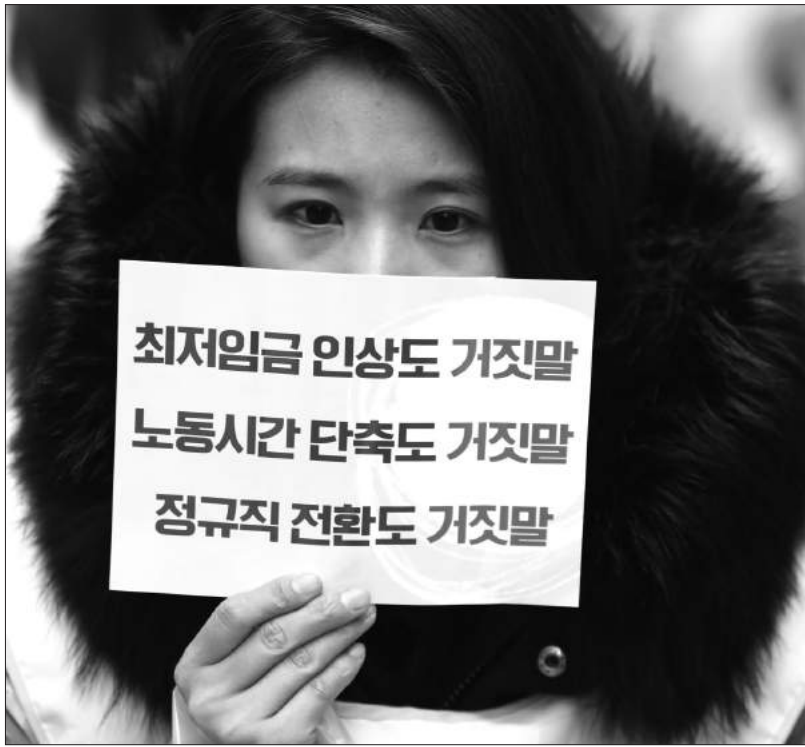
21일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가 아니고, “최저임금 쫓다 뺀고 노동시간 줄였다 늘리는 거짓말 정부”라고 규탄했다.

‘답정너’

이처럼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대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는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 21일 파업 하루 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원회 공익위 안을 발표해 마치 노동계의 핵심 요구를 수용한 것 같은 인상을 풍겼다. 〈한겨레〉는 “노정관계 경색을 풀 고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측면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공익위 안은 노동계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노조 내 활동은 여전히 제약이 크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대통령 공약인데도 “방안 모색”이라는 말로 모호하게 처리했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회는 회피하고 법 개정 문제로 떠넘겼다. 특히, 장차 소위 ‘사용자 대항권’(직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 맞바꾸기가 중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거짓말 정부”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본지 온라인 기사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를 보시오.)

둘째, 21일 파업 다음날에는 경사노위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 참여를 압박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가 결정되지 못한 것을 무시하려는 주장인 셈이다! 경사노위 참가 결정 무산은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민주노총 내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의 입지가 좁아진 결과인데도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총 내에서는 경사노위 참가 결정이 무산됐어도 산하위원회에는 참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점을 파고들어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

셋째, 하반기 들어 분노의 초점으로 떠오른 탄력근로제 확대의 추진 시기

를 뒤로 조금 미뤄 대화 모양새를 취하려 한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했고,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 개악 의사를 철회하고 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답정너’ 식 논의를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개악 추진 당사자가 ‘개악 보완책’이라도 논의하려면 대화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우물쭈물 뿐이다.

11월 21일 민주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가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도 여당이 대화를 요식행위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잘못된 단서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쟁 동력을 이완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 대

회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완화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2차, 3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2차, 3차 파업을 경고한 것은 옳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라는 단서는 정부나 국회가 대화방식을 취하면 투쟁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경사노위나 산하위원회 참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출범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옳게 비판하면서도) 민주노총에게 “대화의 끈을 놓아버리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이해득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이 투쟁을 해서 사측이나 정부를 협상장에 끌어 내는 것과, 사측이나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뿐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대화, 타협, 양보, 고통분담”을 촉구하는 마당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는 신자유주의가 유력하던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수야당들과 손잡고 추진하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유연화(탄력근로) 등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가하더라도 본위원회 18명 중 1명이 될 뿐이다. 민주노총의 대표성은 노사정위에서보다 더 축소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에게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기사자동차 화성비정규직지회

등 비정규직 노조들은 경사노위에 참가한 ‘비정규직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대표성을 위임한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2018. 11. 28)

무엇보다, 시기를 정해 놓고 합의를 압박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정부 정책의 추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위기 관리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배신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우파의 기를 살려 줬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욱더 민주노총을 경사노위로 끌어들이 양보를 이끌어 내는 면모를 지배계급에 보여 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져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관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 위기 시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국가에 통합되는 경향은 더 강화됐다.

노동조합 투사들은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하고 투쟁이 확대되는 흐름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과 투쟁을 아래로부터 촉구해야 한다.

다행히 공공운수노조는 11월 27일 임시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각종 위원회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흡수 방식의 경사노위 각급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2018년 11월 28일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대표집필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

김지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1월 2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20일에는 전면 파업을, 21일과 27일에는 7시간 파업을 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승리, 구조조정 분쇄,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구조조정 공격을 관철하려고 노조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점이 최근 드러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곧 있을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측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사측이 온갖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00쪽이 넘는 문건 가운데 노조가 공개한 일부 내용만 봐도 충격적이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성향을 5등급으

로, 대의원들을 녹색·황색·청색으로 분류하고, 사측에 우호적인 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을 ‘관리’해 왔다. 이들의 대의원 당선을 위해 후보 선정과 운동에 개입하고, 경조사비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파 대의원들에 대한 악의적 선동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일대일 면담, 각종 모임 등을 이용했다.

문건에는 “실질적으로 합리파로 전향”시킨 민주파 대의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강경파로 보이도록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노동부와 검찰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일별백계 하라”고 촉구하고 현대중공업 부회장 권오갑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에도 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조합원 성향 관리’ 계획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김종훈 국회의원이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그 때마다 사측은 꼬리 자르기를 했다. 이번에도 사측은 관련 부서장이 문제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나섰지만, 일부 부서에 한정했다. 여러 형식 절차를 들어 미적대고 있다는 불만도 노동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11월 27일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로 쫓아 올라가 항의했다. 평소 상경 투쟁할 때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해 분노를 나타냈다.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다음엔 청와대로 갈 겁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 수년간 구

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원하청 노동자 3만 50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을 대폭 깎고, 분사·외주화를 밀어붙이고, 휴직·순환교육 등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을 고통에 내몰았다. 지금도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 단협 개악, 무급휴직 등을 강요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맞서는 투쟁과 노동자들을 제압하려고 부당한 노조 개입과 탄압에 힘을 쏟아 왔다. 민주파 활동가·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친사측 우파의 기를 살려 주려는 것이다.

폭행 사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측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사실상 파업을 비난한)에 항의한 민주파 소위원이 우파에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성향을 분류해 갈등을 조장하고 우파의 기를 살려 준 것이 이런 사건을 낳은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의 분노는 상당하다. 파업 참가자 수도 몇 달 전에 비해 좀 더 늘었다고 한다.

회사는 노조에 재발 방지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자들은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립서비스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조가 요구해 온 문서화된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사측(과 우파)의 기를 꺾어 놔야 한다.

이런 투쟁은 사측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 데서도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윤 논리 앞세우는 사립 유치원과 자유한국당 이 사회의 진정한 적폐에 맞서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문제를 폭로했다. 그러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과 우파 정치 세력이 크게 반발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른바 ‘박용진 3법’). 이 개정안은 사립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립 유치원에 지급하는 돈의 명목을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돈은 처벌·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사실 이 개정안은 미흡한 개선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립 유치원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합법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장부와 장부 외 비리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하고, “불법 가작 경영에 대한 방지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의 지적이다.

요컨대, 기존 사립 유치원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약간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한유총은 이 법이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용진 3법’을 반대하며 11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일부 유치원들은 폐원 협박도 한다. 올해 모집 중지과 폐원을 한 유치원은 전국 70곳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지난달 말에 견주면 이달에 폐원하는 유치원이 8배 가까이 급증했

다. 이 때문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사유 재산” 침해라는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사립 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사립 유치원들이 요구해 온 것이다. 정의당은 “가져가는 게 편이라더니 사학재벌들이 득시글거리는 자유한국당다운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그런데 정부·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민간의 보육 사업에는 공공성과 동시에 사유재산 보호의 양면이 있다”며 우파의 손을 들어 줬다.

사유재산?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의 “사유 재산”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사립 유치원들은 2조 원이 넘는 국가 지원을 받고,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유치원은 법률적으로도 비영리 교육시설인 ‘학교’로 규정돼 있다.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장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천박한 이윤 추구 논리이다.

역대 정부들이 유아 교육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 업체들에 맡겨 온 것이 문제다. 이 과정에서 온갖 부정·부패와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났다. 막대한 정부 지원은 눈 먼 돈이 돼 민간 업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정부는 민간 유치원의 이윤 추구를 지원하며 이들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펴 왔다. 그 결과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에게 가야 할 돈을 도둑질한 것을 넘어,

그 돈이 애초에 자기 것이었다는 주장을 버티기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개인 유치원 신설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학교 법인과 국공립 유치원을 통해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상황은 사학 재단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했던 노무현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2005년, 사립대학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다. (‘박용진 3법’이 그렇듯이, 당시 개정안도 미리부터 우파의 반대를 염두에 둔 미흡한 안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반대에 부딪혀 이 개정은 누더기가 됐다.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사학재단 소유주들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장외 투쟁을 이끌었고, 노무현은 굴복했다. 이는 지지층에게 실망을 주며 노무현 정부가 위기로 빠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계급투쟁이 약하면 민주당 같은 중도파 정부는 우파의 압력에 더 쉽라 타협할 것이다. 계급투쟁이 강하면 좌우의 압력 속에 중도파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 줄어들고, 그 왼쪽에서 대안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진정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려면 정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노동계급이야말로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유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정선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가 하락은 미국-사우디 관계의 부산물

11월 23일 유가가 배럴당 47파운드[한화로 약 6만 9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최근 1년 이상 동안의 최저치를 찍었다. 약 두 달 전 유가는 배럴당 67파운드[한화로 9만 5400원]까지 올라 근 4년 동안 최고점에 이르렀는데 말이다. 물론 시장은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영국인 정치학자 사이먼 브룸리의 말처럼 석유는 “전략적 상품”으로, 정치 권력의 원천이다. 최근 유가가 요동친 것은 경제보다는 정치와, 특히 국가들 간 지정학적 경쟁과 더 관련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정책과 관련 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을 고립·약화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가 이란 정부와 맺은 핵협정을 파기했고,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부활시켰다.

바로 이 경제 제재가 유가 인상을 촉발했다.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 석유 수출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어서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유가를 떨어뜨리려 혈안인데, 석유 소비량이 많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對)이란 제재 부활 이후에도] 8개 나라가 제한된 양의 이란산 석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줬다. 그랬는데도 이란 석유 수출량은 감소했다. 4월에는 하루 280만 배럴이었던 수출량이 10월에는 하루 180만 배럴이 됐다. 다른 산유국들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수출량을 늘릴 법하다.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구실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사위이자 중동 부문 총괄자인 재러드 쿠슈너는 취임 직후부터 야심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과 매우 친밀해졌다. 트럼프와 쿠슈너는 빈살만을 대(對)이란 동맹의 핵심으로 보면서, 그가 자신들을 도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근경

그러나 빈살만은 현재 큰 근경에 빠져 있다. 사우드 왕가를 온건하게 비판해 온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후, 빈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 정계를 주도한 2015년 이래 펼쳐 온 무모한 정책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예멘에서 벌이는 파괴적 전쟁, 사우디아라비아 부자들을 탈탈 털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벌인 ‘반부패’ 정책, 레바논 총리 납치 등이 그것이다.

사우드 왕가 내 빈살만의 정적들은 빈살만을 전방위에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가 빈살만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 빈살만이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했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매우 확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신”한 직후, 트럼프는 횡설수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빈살만이 이 비극적 사건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적지 않다. 어쩌면 알았을 것이고 어쩌면 몰랐을 것이다.”

트럼프는 빈살만이 카슈끄지를 “국가의 적”이라고 묘사한 것을 인용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맞선 “훌륭한 동맹”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어서 이렇게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3500억 파운드[한화로 약 50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동의했다.” 이 수치는 의심의 여지가 크다. 하지만 그보다는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유가를 합리적인 선으로 유지했으면 한다는 나 [트럼프]의 요청을 매우 잘 따라왔다”고 칭찬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지원이 간절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산출량을 하루 약 110억 배럴까지 늘렸다. 손해 보지 않으려면 유가가 배럴당 최소 62파운드[한화로 약 8만 9000원]는 돼야 하는데도 말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했다. “트럼프는 이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삐를 틀어줘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 부편집인 톨라 칼라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사우디아라비아 우선 정책”에 분노를 표했다. 그러나 이어서 칼라프는 이렇게 회상했다. “현대 사우디아라비아를 건설한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가 1945년에 미국 해군 전함 USS퀸시 호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를 만난 이래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엄밀히 정해진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오일 달러’를 재사용할 것,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존을 보장할 것, 인권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던 적은 없었다.”

인권만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동맹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유지된다. 유가가 기록적인 최저점을 찍자, 백악관은 자기 정부 전문가들의 경고를 담은 보고서도 반려해 버렸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했다. 세계가 화석연료 없는 경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기후 변화 때문에 수천억 달러를 소모하게 될 것이며 1년에 수천 명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32호 / 번역 김준호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직장 □노조 □대학 □초고등학교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몰락의 전설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이 기사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마르크스주의 개간지** **《인테내셔널 소셜리즘》** 160호(2018년 가을)에 기고한 'Legends of the fall'을 차승일 기자가 번역·요약한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얼마 전 10주년을 맞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화두로 10년간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고, 그와 연결된 서구 정치의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을 다룬다. 글의 후반부에 영국 정치 관련 논의가 많지만 한국 좌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기를 이해하기

2018년 9월 15일에 10주년을 맞은 월스트리트 투자는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결정에 이른 금융 위기와 2008~2009년 세계경제를 휩쓴 대불황의 관계다.

[자유주의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는 이 위기에 관한 방대한 비판적 역사서 《붕괴》에서 이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다. 투즈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은행들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고 양적 완화를 시행한 덕분에 위기가 해소됐다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는 2012~2013년의 상식과는 달리 위기가 사실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 2007~2012년의 금융·경제 위기는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탈장전 질서 전환의 정치적·지정학적 위기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것의 명백한 정치적 함의를 제쳐 놓아서는 안 된다. ... 2012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중도적 자유주의의 슬러피를 불러낸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포퓰리즘”의 성장이 [2008년의] 위기와 대불황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술이 서 말아도 꿰어야 보배다.

먼저 경제 위기를 살펴보자. 투즈가 보기에, 이 위기는 자신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 대서양 양안 시스템”이라고 부른 것의 위기이다. 투즈는 1970년대 초

이래,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 동안에 미국과 유럽이 하나의 “금융 순환체계” 속에 묶이게 됐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미국에서 또는 1950년대 이후로 시티오브런덴[영국 금융 중심지]에서 발전한 역외 달러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는, 주로 수익성이 좋은 미국 시장에서 대출을 했다. 유럽 은행들은 1990년 유로화 도입에 뒤따른 신용 호황 때 이 모델을 차용하면서 유럽 대륙 전역에서도 자산 거품을 일으켰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관련해 위협했던 것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불량 채권으로 바뀌면서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 줄 때 이용한 시장의 기능이 2007년 8월에 멈췄다는 것이다. 대서양 양안간의 “순환체계”를 먹여 살리던 달러의 흐름이 중단된 것이다. 이는 은행뿐 아니라, 달러 시장에 자금을 조달하던 공업·상업 기업들도 위협했다.

투즈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그 과정을 가속했지만 촉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레도 그 여파로 자금 시장은 완전히 얼어 붙었다. 사태를 뒤집는 결정적 조처는 미국 중앙은행이 취한 단호한 노력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정말로 극적인 혁신을 이뤘다. 연준은 세계 은행권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자리 잡았다. 연준은 뉴욕으로 오는 모든 은행에 달러를 공급했다. 그 은행이 미

국계나 아니냐를 따지지 않았다. 연준은 이른바 통화 스와프를 통해 몇몇 주요 나라 중앙은행들에게 수시로 달러를 발행해 줬다. ... 이 통화 스와프를 통해 유럽중앙은행 등은 유럽 은행들에 수조 달러를 투입했다.”

투즈는 이렇게도 지적한다. “위기 이전에 대서양 양안의 역외 달러 시스템은 명확한 지도적 중심이 결여돼 있었 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 그 시스템은 연준과 연준의 유동성 공급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조직됐다.”

이런 주장은 2007~2008년에 미국 헤게모니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거는 부인하는 것이다.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데리고서 위기 관리를 조율했고, 이것이 미국 헤게모니의 결정적 측면이라는 얘기가기 때문이다.

잠재적 위기

투즈의 분석의 강점은 대서양 양안의 금융 시스템에 집중하고 그 시스템이 국제 정치 질서(특히 미국과 유럽의 정치 질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투즈는 위기가 남긴 매우 중요한 유산을 포착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 국가에 의해 구원받은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새로운 잠재적 위기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연준은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실

시해 막대한 달러를 세계시장에 풀었고, 그 덕분에 “신흥 시장” 경제들이 [2008년] 대불황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자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연준이 양적완화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며 달러를 매우 싸게 공급하는 일을 중단하자 문제가 생겼다.

올해 여름,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터기 리라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거의 붕괴했다. 아르헨티나는 특히나 흥미로운 사례이다. 현임 우파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전임 대통령들의 온건한 케인스주의 정책을 뒤집어 정설 신자유주의로 회귀했다고 크게 칭송받고 있던 터에 그런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붕괴》의 약점은 그 장점과 동전의 앞면만 관계이다. 바로 정치적 리더십의 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투즈는 미국의 위기 대처에서 핵심적이었던 인물들은 두드러지게 긍정적으로 그리는 반면,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할난한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장클로드 트리셰와 마리오 드라기 등 ‘브뤼셀 패거리’가 보인 서투름과 냉담함은 확실히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치적 선택·이데올로기·행위”에 몰두하다 보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증대한 위기 때 드러나는 “치유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부른 것을 간파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투즈는 왜 대서양 양안의 달러 시스템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세계 자본주의에서 그토록 중요했는지 결코 묻지 않는다.

그러기 위한 필수적 조건 하나는 진정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프슈테텐(독일어로 “일어서라”라는 뜻)—더리게(좌파당)의 지도적 인물인 자라 바젠크네히트와 오스가 라퐁텐이 사민당과 녹색당 지지자들을 좌파당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목적으로 올해 여름에 시작한 운동—은 적격이 아니다. 이런 규제를 강화하자는 우파의 요구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영국 노동자 운동 안에도,

즉, 투즈의 분석에서 생산은 전혀 무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가 써들린 장기적 이윤율 문제의 뿌리는 생산에 있다. 즉, 노동력에 대한 투자보다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마르크스의 표현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과 이 행에 구제 금융을 제공한 탓에 여전히 있다. 소수 대기업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본의 파괴”로 경제가 회계적 긍정적으로 그리는 반면,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할난한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장클로드 트리셰와 마리오 드라기 등 ‘브뤼셀 패거리’가 보인 서투름과 냉담함은 확실히 비난받을 만하다.

따라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자본주의는 치유되지 않았고 “장기 불황”—그람시의 표현 “구조적 모순”을 반영하는 장기적 저성장의 시기—에 사로잡혀 있다.

전진 태세의 극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기초 자체에서 위기의 뿌리를 찾는 것은 장기 불황의 정치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도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최근에 투즈는 다음과 같이 썼다. “대중 민주주의의 비이성적 열정에 맞서 기술관료적 정부를 옹호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투즈는 “대중 민주주의의 비이성적 열정”을 가법계 내치면서, 위험하게도 신자유주의적인 극단적 중도파의 오만함에 다가간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포퓰리즘”의 반란을 낳은 일차적 요인은 신자유주의를 지속하기로 한, 아니 더 극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서구 지배계급의 고집이었다.

게다가 그 격변이 끝나 간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사실 현재 서구 정치의 가장 유력한 특징은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즘이 대서양 양쪽 모두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집권은

그런 일이 일회성 사건이 아님을 입증했다. 트럼프는 국제적으로 두 가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첫째, 그의 자국 우선 경제 노선과 관계된 것으로, 중국과의 전면적 무역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둘째, 유럽 극단적 중도파의 아성, 특히 독일의 메르켈을 겨냥해 여러 정경(무역, NATO, 이민)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메르켈은 지난해 총선 결과로 이미 약해진 상태였다. 가카스로 구성된 연립정부의 정통성은 약했다. 정부에 포함된 정당들의 총 득표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최근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지율의 합이 50퍼센트가 안 된다.) 또한, 극우 정당인 독일유일한대안당(AfD)이 총선에서 3위를 해 창당 이래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메르켈은 자기 정당 내 정책들을 비판하면서도 이민자에 대한 혹독한 단속을 개시했다.

“헤게모니의 위기”와 좌파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공지에 물리고 기성 정치권이 대중으로부터 거부당하며 서구 자본주의는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그람시가 “헤게모니의 위기”라고 부른 현상이다. “헤게모니의 위기” 상황에서 지배계급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설득하지 못했다. “헤게모니의 위기”는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즘이 성장할 기회를 열어 주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있다.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어떻게 하면 급진좌파와 혁명적 좌파가 광범한 노동계급 대중—적어도 일부는 최근 극우로 이끌리고 있는 대중—에게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한 필수적 조건 하나는 진정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프슈테텐(독일어로 “일어서라”라는 뜻)—더리게(좌파당)의 지도적 인물인 자라 바젠크네히트와 오스가 라퐁텐이 사민당과 녹색당 지지자들을 좌파당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목적으로 올해 여름에 시작한 운동—은 적격이 아니다. 이런 규제를 강화하자는 우파의 요구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영국 노동자 운동 안에도, ‘축구 사나이 연맹’과 [파시스트인] 토미 로빈슨 등의 이슬람 혐오적 연맹 일하는 운동의 추진력이 커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 주장의 핵심인즉,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나 체계적 차별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저 이스라엘 국가가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고 여전히 그렇다는 명징한 역사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유대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중 둘째 목표는 유력 유대인 신문들이 7월에 발표한 공동 사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글은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가 국제홀로코스트추모동맹(IHRA)의 일관성 없고 선택적인 유대인 차별 규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 주장의 핵심인즉,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나 체계적 차별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저 이스라엘 국가가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고 여전히 그렇다는 명징한 역사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유대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코빈 비방 운동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로서 그의 신인도를 떨어뜨려서 그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가능하면 파괴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 운동 안에서 이스라엘 비판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중 둘째 목표는 유력 유대인 신문들이 7월에 발표한 공동 사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글은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가 국제홀로코스트추모동맹(IHRA)의 일관성 없고 선택적인 유대인 차별 규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 주장의 핵심인즉,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나 체계적 차별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저 이스라엘 국가가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고 여전히 그렇다는 명징한 역사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유대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후퇴

9월 초 노동당 전국 집행위원회는 이 압력에 굴복해 국제홀로코스트추모동맹의 규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의 중대한 승리였다. 이 때문에 노동당 안에 말 당대회에서 맥도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물려받은 스러끼가 불수록 우리는 더 급진적이 돼야 한다. 변화의 필요성이 클수록 우리가 그 어떤 변화를 창조할 기회가 더 커진다.”

그러나 코빈의 처지는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때 뒤따르는 위험도 보여준다. 올여름 코빈에 대한 공격이 재개됐



브라질에서 집권한 극우 정치인 보소나루

인종차별

이런 이민자 탄압은 트럼프의 유럽 동맹자들도 촉구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부총리 마테오 살비니,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그들이다.(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정부에는 파시스트들도 있다.) 올해 3월 이탈리아 총선의 결과로 오성운동과 ‘동맹’의 연립정부가 들어선 것은 유럽의 극우가 크게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올해 6월 말 열린 유럽이사회(유럽연합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서 극단적 중도파는 이민자 문제를 두고 극우에게 굴복했다. 유럽이사회는 이민자에 대한 인신매매·납치·강간이 성행하기로 악명 높은 리비아에 이민자 억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고,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NGO [난민] 구조선을 단속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의 국경 수비대 프론티어는 증강되고 있다.

한편, 극우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 올해 9월 스웨덴 총선에서 [파시스트들이 창당한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득표율을 세 갑절 이상으로 끌어올렸 다(4.6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요즘의 극우는 정치적으로 여러 조



올해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종차별·나치 반대 집회

건을 국민투표에 부처야 한다는 생각은 일찍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 2016년 6월 실시한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하자는 운동의 추진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

단결

‘민중 투표’의 진정한 문제는 정치적 인 것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는 영국 사회에서 유럽연합을 보는 태도가 양극으로 썩 갈려 있음을 드러냈다.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수록 탈퇴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투표 재실시는 당시 탈퇴에 투표한 유권자의 상당수가 느낄 사회적·정치적 소외감을 강화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어쨌든, 국민투표 재실시는 보수당 내 유럽 통합 회의론자들과 극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그들은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려는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을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이민자 배척 담‘도 국민투표 재실시를 지지하라고 코빈을 압박한다. 영국노동은 9월 초에 ‘민중 투표를 지지하며 악역을 자처했다. 결국 노동당 당대회에서 코빈과 맥도넬은 총선 실시 요구를 우선하지만 국민투표 재실시를 전보다 더 강조한 결의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연합과 합의된] 브렉시트의 조

류가 섞여 있다. 그중 유력한 경향은 부르주아 정치를 이민자 배척적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와 유럽 통합 회의론을 기초로 재편하고자 한다. 경제 정책을 두고는, 특히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촉진한 세계화 과정으로부터 얼마나 거리를 둘 것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주된 메시지는 같다.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이민자들이 몰릴듯 유입되는 것을 허용해 온 자유주의 엘리트들에게 국민이 배신당했다는 것이다.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성장은 진정한 파시스트 세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독일 유원한대안당은 “국민적·보수적” 분파와 “국민적·혁명적” 분파로 나뉘어 있는데, “국민적·혁명적” 분파는 당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파시스트 세력을 대표한다. 곳곳에서 극우가 성장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종차별·나치 반대 집회

나 탈퇴냐를 놓고 분열했던 좌파를 더 한층 분열시키고 코빈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둘 것이다. ‘모멘텀’은 국제홀로코스트추모동맹의 유대인 차별 규정을 지지하고 있는 위험을 좌파가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단결할 필요성을 극명히 보여 준다.

지금은 담대함이 필요한 때다.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정당성이 위기를 겪고 있다. 영국 국가는 폭풍우 치는 바다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 합이 없는 브렉시트 전방이 강제로고 있어서다.

그 결과로 어쨌든, 국민투표 재실시는 보수당 내 유럽 통합 회의론자들과 극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그들은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려는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을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이민자 배척 담‘도 국민투표 재실시를 지지하라고 코빈을 압박한다. 영국노동은 9월 초에 ‘민중 투표를 지지하며 악역을 자처했다. 결국 노동당 당대회에서 코빈과 맥도넬은 총선 실시 요구를 우선하지만 국민투표 재실시를 전보다 더 강조한 결의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 침체와 그것이 낳은 헤게모니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경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종차별적 우익과 그 안의 나치에 맞선 반대를 최대한 강력하게 결집해야 한다.

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차승일

탈코르셋 운동에 담긴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

올해 초부터 '탈코르셋'이 10~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반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코르셋은 단지 중세 시대 여성이 착용하던 보정 속옷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화장한 얼굴, 긴 머리, 날씬한 몸매 등 일정한 외모 기준”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탈코르셋은 그런 외모 기준을 따르지 않는 운동을 뜻한다.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탈코르셋”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1만 건이 넘는다. 그러나 단지 SNS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적 여성운동인 불법촬영물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이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 탈코르셋을 한 여성을 많이 볼 수 있다.

불법촬영물 반대 운동을 확고히 지지해 그 운동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스스로 부수기 위해 탈코르셋 운동이 생겨났다.”

여성들에게 특정 기준의 아름다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은 실질적이다.

예를 들어, 많은 여성이 몸을 마르게 하려고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하다가 식사장애(섭식장애)를 겪는다. 한국에서는 10~20대 여성의 16~25퍼센트가 식사장애를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에서는 250만 명이, 미국에서는 여성 대학생의 25퍼센트가 식사장애를 겪는다.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인사 담당자의 63.8퍼센트가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한다고 답했다. 남성(6.2퍼센트)보다는 여성(40.3퍼센트), 경력직(8.4퍼센트)보다는 신입(37.4퍼센트) 채용 때 외모 평가 비중이 높았다. 그래서 일부 구직자들은 ‘면접 성형’도 받는다.

최근 충남의 한 카페에서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

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부당한 일이 있었다.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여성도 예외는 아니다. 이른바 ‘접견 전문 변호사’ 문제이다. 변호사 접견이 잡히면 구치소 수감자는 좁은 감방에서 벗어나 횡수·시간 제한 없이 접견실에 머물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해, ‘접견 전문 변호사’는 부유한 남성 수감자의 심부름꾼·말동무가 되는 대신에 시간당 30만~3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일부 로펌은 젊은 신규 여성 변호사를 부유한 남성 수감자를 위한 ‘접견 전문 변호사’로 채용하고, 신체 치수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몸과 성을 누군가의 성적 흥미를 이끌어내고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성 상품화를 반영한다. 성 상품화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여겨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여성 차별이 법률적으로는 많이 사라졌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엄존하는 것이다.

요컨대, 특정한 기준의 아름다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은 사회적으로 여성이 천대받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남성에[게도] 이발과 면도와 양복/넥타이로” 마찬가지 외양적 규범이 요구된다는 ‘나무위키’식 항변은 엄연한 여성 차별의 현실을 부인하는 몰지각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남성도 외모에 따른 불이익을 보곤 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에 가해지는 사회적 압박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질적 차이를 낳을 만큼 크다.

탈코르셋 지지 여성들의 정서에는 자기 몸조차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회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내 몸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 나”이고 싶고, “예쁜 것만이 정당한 사회가 아니라 모든 얼굴이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사회”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불법촬영물 반대 집회에서 삭발을 하는 여성

운동의 수단으로서 탈코르셋

그럼에도 탈코르셋이 여성 차별을 해소할 수단으로 효과적인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여기서는 개인의 선택으로서 꾸미지 않는 것과 운동의 수단으로서 탈코르셋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적 가치 부여 없이 개인이 꾸미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지지한다, 반대한다’ 할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월한 라이프스타일(생활 방식)로 여기고 운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여성 해방의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효과성과 역효과성 여부 판단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탈코르셋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며 실천도 강조하는 여성 커뮤니티인 ‘위마드’를 중심 사례로 놓고 살펴보겠다. (위마드는 불법촬영물 반대 운동을 이끈 ‘불편한 용기’의 주축으로도 알려져 있다.) 단지 탈코르셋 운동의 특징을 위마드가 선명하게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위마드 외에도 탈코르셋 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은 꽤 있다.

도덕주의와 선민의식

탈코르셋을 운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 그리고 단지 그 행위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도 — 거의 필연적으로 도덕주의와 선민의식을 내포하게 된다. 위마드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스튜어디스 같은 특수 업종 아니면 탈코르셋 한다고 불이익 볼 일 거의 없다. 아이티업계나 이공계에선 오히려 ‘여자’처럼 보이면 경쟁자로 안 보고 성적으로 대하고 일도 안 준다. 이

건 예전부터 해 오던 말 아닌가? ‘사회적 불이익 참아 가며 머리 자르고’ 투사처럼 굴고 희생해야 한다는 건 무슨 운동권 마인드인가? 사회적으로 뭣씩워진 굴레를 벗어 내고 성공에 집중하고 내가 편해지는 게 탈코르셋이다. 탈코르셋이 괴롭다는 건 ‘너도 좀 꾸미고 다녀’ ‘꾸미면 예뻐 텐데’ 따위의 시답잖은 소리를 아직도 신경 쓴다는 뜻이다. 탈코르셋이 무슨 희생이나. 이득뿐인데.”[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마드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말은 특수한 용어들을 표준어로 바꾸는 등 약간 고쳐 썼다.]

탈코르셋을 실천하기 힘들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다. 이 말은 그런 직종의 여성은 운동 참여자가 될 수 없음을 함축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스튜어디스 같은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만 탈코르셋을 실천하기 힘든 것은 아니다. 취업면접을 준비하는 여성은 거의 모두 탈코르셋을 실천하기 무척 힘들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 현실이 매우 부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취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취업이 아니더라도 짧은 헤어스타일 등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아 탈코르셋을 하기가 꺼려지는 여성도 꽤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탈코르셋 운동은 대중이 현실적으로 따르기 힘든 준칙을 요구한다.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도덕 준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도덕주의라고 부른다.

도덕주의는 선민의식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그 어려운 준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월해 보이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은 탈코르셋이 생각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내가 편해지는 게 탈코르셋”이라고 설득하는 글이다. 그런데 이조차 못마땅한 강경파가 있다.

“탈코르셋이 왜 편하려고 하는 거냐? 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편한 거지 편하고자 하는 게 탈코르셋은 아니다. …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상을 부수고자 나온 게 탈코르셋이다. 투블럭이라고 거지 산발에 머리 안 만지고 다니는 줄 아냐?”

사실 위마드의 코르셋 규정은 보통의 규정보다 훨씬 폭넓다. 위마드 관리자가 게시한 ‘위마드 단어 사전’은 코르셋을 이렇게 규정한다. “여성 혐오나 차별에 익숙해져 그러한 억압에 순종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인 여성.”이 규정에 따르면, 아직 탈코르셋을 실천하지 못하는 여성은 여성 차별을 (수동적이더라도) 내면화하고 있는 여성이다.

이런 관점은 “미(未)각성” 상태의 여성을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죄책감이나 반발심

선민의식과 도덕주의는 그 준칙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겨 준다.

“판을 뒤집겠다면서 탈코르셋 가지고 아직도 논의한다는 게 자기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냐?”, “웬오니까 이것이 옳다고 믿으니까 밀고 나간다 이거야” 하는 축구는 자신들의 패기를



여성에게 특정 기준의 아름다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은 실질적이다



각종 화장품과 렌즈 등을 파괴해서 찍은, SNS에서 유행하는 탈코르셋 인증 사진

잘 보여 줄지는 모른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성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와 달리 이런 말은 과도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더 쉽다. 그리고 비현실적 요구를 담은 질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죄책감이 들게 한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되기보다 수동적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크다. 적극성은 확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발현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반발심을 줄 수 있다. 실천 불가능한 준칙을 들이밀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것은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위마드 단어 사전'에는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성"이라는 뜻의 경멸적 단어도 존재한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남편이 벌어오는 임금에 의존하는 여성,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서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여성, 아버지가 유일한 수입원인 가정에서 아직 취직하지 않은 여성 학생이나 취준생 등 어쩔 수 없이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여성"이 있다. 그들을 싸잡아 모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반발심을 주는 방식은 대중 운동으로 성장할 수 없다.

분열

게다가 도덕주의와 선민의식은 분열을 조장한다. 벌써부터 그런 위험

성이 있는 주장이 제기된다. "탈코르셋도 못하겠으면 그냥 타 커뮤니티로 꺼져라 이거야."

이런 과도해 보이는 주장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특정 생활 방식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뉜다. 그런데 그 구분은 사실이나 정치처럼 자발적 선택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분열을 낳는 구분이 된다.

그리고 탈코르셋을 할 때 헤어스타일, 화장(법과 여부), 옷차림 중에서 무엇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느냐는 논란도 있다. 예를 들어, 머리를 짧게 자르지만 화장을 하는 것, 화장은 안 하지만 머리는 길게 기르는 것, 머리도 짧고 화장도 안 하지만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 등이 탈코르셋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것이다. 탈코르셋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상을 부수고자" 하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상"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가 확실치 않아서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 차별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상"으로 본다. 그런데 그 여성상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비롯할까? 답변은 대개 남성이 만들었다는 생물학적 견해이거나, 남성과 여성에게서 탈피하지 못한 여성이 함께 만든 문화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성뿐 아니라 남성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여성도 마치 적처럼 여겨지게 된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탈코르셋 운동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개인의 정치학'의 일부이다.

개인의 정치학이 유행한 것은 1970년대 중후반 서구에서였다. 당시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좌경화를 낳고 혁명이 한 세대를 탄생시킨 1968년 반란이 퇴조하고 패배하던 시기였다. 그 반란의 핵심이었던 노동계급의 투쟁이 곳곳에서 패배했다. 1968년 반란의 일부로 등장한 여성 해방 운동도 전체 운동의 쇠퇴와 함께 가라앉았다.

일부는 운동을 평가하며 교훈을 얻고 혁명가로서 단단해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운동의 퇴조와 함께 사기가 떨어지며 학계로 가는 등 운동에서 멀어져 갔다. 일부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도전이 아닌 개인의 영역으로 관심을 돌렸다.

여성운동도 그런 식으로 파편화했는데, 그중에서도 급진주의를 분리주의(남성 반대)로 극단까지 밀어붙인 경향의 하나가 정치적 레즈비언주의이다. 그 대표 이론가인 쉐라 제프리스는 《적을 사랑하는가?: 이성애 페미니즘과 정치적 레즈비언주의 간의 논쟁》이라는 책을 써서 레즈비언 되기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제프리스의 주장은 위마드식 페미니즘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국내에는 《래디컬 페미니즘》(열다북스)과 《코르셋》(열다북스)이 국역 출판돼 있다.

제프리스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 '리즈 레볼루션너리 페미니스트 그룹'은 이렇게 선언했다. "남자와 함께 살거나 섹스하는 모든 여성은 자매들에 대한 역할을 유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는 것이다." 당시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의 일부 단체는 기혼 여성의 가임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1970년대 생겨난 소규모 여성 공동

체들은 얼마 안 가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나라 최초의 대중적 여성운동을 건설하고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들이 운동 퇴조기 시기 저하를 반영해 유행했던 이론과 운동을 따르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볼 일이다.

물론 당시의 서구와 지금의 한국은 정치적 맥락이 다르므로 그때의 이론과 운동이 그대로 재연되기보다는 변형돼 나타나고 있다. 불법촬영물 반대 운동 조직자들은 분리주의를 적용해서 생물학적 여성만 집회 참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뒀지만, 참가자들에게 레즈비언 되거나 탈코르셋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런 집회에 나오면서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오느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자본주의의 흡수

탈코르셋 운동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일상 생활 방식 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치학'의 근본적 한계를 공유한다. 바로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한계이다. 사회는 개인들을 재료로 하지만 그저 개인들의 총합인 것은 아니다. 그 개인들은 특정한 구조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에 따라 인간

대중적 여성운동을
건설하고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들이
운동 퇴조기 시기 저하를
반영해 유행했던 이론과
운동을 따르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볼 일이다

사회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사회들로 바뀌어 왔다. 그 관계에서 핵심적인 것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관계이다. 개인들의 일상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운동은 이 관계를 바꿀 수 없다.

또, 자본주의는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흡수하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 내는 재주가 있다. 성의 표현을 억누르는 것에 반발한 운동의 요구를 일부 흡수해 성의 상품화를 더욱 부추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탈코르셋 운동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타고난 곱슬머리를 펴지 않고 그대로 두는 종류의 탈코르셋 운동이 있다. 백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최근 곱슬머리로 돌아간 것이 한 사례이다. 그러자, '아프로 헤어'(아프리카 헤어스타일) 관리법과 상품이 생겨나고, 어두운 피부를 위한 색조 화장품과 곱슬머리 전용 샴푸 등 흑인 대상 뷰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광고업계에서는 '펌버타이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펌버타이징은 페미니즘과 광고(애드버타이징, advertising)의 합성어로, 그동안 광고에서 정형화돼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이다. 주류 광고에 별 상관도 없는 벗은 몸의 여성이 등장하거나 의료 광고에는 꼭 마르고 키 큰 모델만 나오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펌버타이징을 통해 이미지 세탁만 할 뿐이지 여성 차별의 종식을 위한 조건(가사와 육아의 사회화)을 마련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런 조건을 구축하려 하면 이윤이 침해받을 것이라며 결사 반대할 것이다. 최근 구글 노동자들은 동맹 파업을 벌여 다양성을 표방하던 구글의 실체를 드러냈다.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

사회의 문제를 개인들의 변화로 해결하려 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특정 생활 방식의 채택을 수단으로 하는 면에서 탈코르셋 운동(특히 위마드 버전의 탈코르셋 운동)은 아나키즘의 한 조류인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과도 관련이 있다.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은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대안적(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하는 종류의 아나키즘이다. 환경(녹색)주의와 페미니즘 진영에서 꽤 광범하게 퍼져 있다.(이 경우 아나키즘적이지 않은 라이프스타일 변화 운동도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언급하자면, 개인이나 뜻 맞는 집단이 그런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생활 방식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며 권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을 줄여야 하겠지만, 분당에 살며 서울 강남에 직장이 있는 노동자들 다수가 매일같이 왕복 3시간 자전거로 통근할 수 있을까? 옹여름처럼 극심한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있을까? 특히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며칠 안 되는 휴가 동안 기차나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

미국의 저술가 머레이 북친은 자신도 아나키스트인데도, 이처럼 보통 노동계급의 삶과는 닿지 않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아나키즘에 대해 "유폐하고 안락한 프리부르주아적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극소수만이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채택한 공동체도 자본주의 체제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공동체의 삶도 여러 부분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존한다. 수천 갈래로 전체 사회와 연결

▶ 10면으로 이어짐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과거사 아닌 현재 제국주의 문제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는 이를 두고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일 간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손상시켰다”고 강변했다.

11월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다. 일본 총리 아베는 이렇게 말했다. “국제적 약속을 안 지키면 국가 간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질서와 약속? 기가 차는 뻔뻔함이다. 남의 나라를 강제 점령해 쑥대밭으로 만들고 전쟁과 학살을 일으켰던 당사국이 엄치도 없다.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 묻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날까 봐 우려한다. 전범 기업이자 일본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미쓰비시가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건으로 소송에 걸려 있고 11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취지의 재판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한 일본 대사는 11월 15일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을 불러 모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에 불복하면 한국 정부는 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쉽사리 그렇게 되지 못하게끔 방어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한국 상황은 중국 등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까지 고무할 수 있다. 일본 기업 일부는 그 여파를 즐기고 중국 피해자들을 달래려고 위로금을 뿌리고 있다. 이런 이중적 행태에 한국 여론은 더 빨아났다.

현재진행형

전쟁 범죄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21세기 들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군사대국화와 관련 있다. 일본은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밀집해 있



일본은 현재의 군사대국화를 위해 전쟁 범죄를 극구 부인한다

는 아시아에서, 강력한 경제력에 걸맞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처럼 일본이 과거 제국의 영광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된 데는 미국 제국주의라는 더 큰 힘이 늘 작용했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소련을 견제할 교두보로서 일본을 끌어들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전황’을 비롯한 전범들마저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봐줬다. 아베와 미쓰비시 등이 덕분에 살아 남아 권력을 유지한 후손들이다.

이제 미국은 몰락한 소련 대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한다.

아베와 자민당은 방어적인 무력 행사만 허용하는 평화헌법(헌법 9조)을 없애려 끈질기게 시도하는 한편, 집권 내내 군사비를 증액해 왔다. 최근에는 2023년까지 군사비를 더한층 획기적으로 늘리고, 항공모함을 제작하겠다고

는 계획도 내놔다.

이 모든 것은 일본 그리고 미국이 또 다른 전쟁 범죄를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전쟁 범죄 문제가 단지 과거지사가 아닌 이유다. 그것은 오늘날 제국주의 문제다.

한 예로, 최근 독도 주변에서 일련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15일 일본 어선이 공동 관리 수역에서 한국 어선을 들이박았고, 20일에는 일본 어선의 조업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해경이 대치했다. 이 날 일본 순시선 2척이 출동해 한국 경비함의 접근을 차단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역사적 기록은 차고 넘치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서 분쟁을 일으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려 한다.

독도 문제로 한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군사대국화를 위한 국내 지지를 모으고, 한국을 향해 제국주의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다.

바다에 둘러싸인 일본 제국주의는 전통적으로 제해권을 중시해 왔다. 먼 거리의 주변 섬을 영토로 확보하면, 그만큼 일본의 해상 세력권도 넓어질 수 있다. 일본이 센카쿠, 북방 4도, 독도 등 도서 영토 분쟁에 집착하는 까닭이다. 게다가 독도 문제는 센카쿠 문제에서 일본 측 논리인 “고유영토”론과도 맞닿아 있다.

일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가 한창 논란인 때 한국 여야 의원단이 두 번에 걸쳐 독도를 방문하자 이를 명분(기회) 삼아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 정부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최근 행태들이 “여론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실제로 친일·친미파 보수 정부조차 과거사 문제에서 대중의 눈치를 본다. 그만큼 식민지 강점 역사가 남긴

상흔이 또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눈치 보기’에 불과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으로 식민지 피해 청구권을 헐값의 경제 개발 자금과 맞바꾼 이래, 역대 한국 정부들은 시종일관 미국·일본 제국주의의 편에 섰다.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다는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는 견해를 고수했다(2005년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문재인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자격으로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

전통적으로 한국 지배 계급은 한·미·일 동맹에 의존해 성장했고, 그 이해관계의 뿌리가 깊다. 제국주의 문제에서 민주당 정부의 실천이 보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보잘것없었던 것은 어느 당이 집권하든 하나같이 지배계급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국주의 문제는 계급을 초월해 민족을 단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족 내 계급 분단선을 더욱 뚜렷하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미·일 국가가 함께 그리는 “미래”에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갈등의 심화가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나 국가 간 외교에 의존해서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모색할 수 없는 이유다.

오늘날의 제국주의를 잘 이해하고 당면 문제들과 접목하면서, 반제국주의적이고 아래로부터의 관점이 분명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승주

▶ 9면에서 이어짐

때 있으므로, 그 공동체도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압력을 받는다. 그 구성원이 나이가 들수록, 특히 아이가 생기면, 그런 압력에 큰 영향을 받고 공동체의 원칙에 대한 헌신성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소수의 삶에서 단막극적 구실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에게 실천 불가능한 생활 방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에 바탕을 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처우가 좋은 노동자일지라도 착취당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당한다. 이 부당함에서 탈피하겠다고 임금노동을 하지 않으면, 즉 실업자가 되면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착취를 끝장낼 잠재력이 있다. 지배계급(자본가와 국가 관료)의 부와 권력의 원천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인 이윤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이윤 생산을 멈춰서 지배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생활조건을 개선할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 그런 투쟁이 일반화하고 심화한다면, 누가 누구를 착취할 필요가 없는 사회, 그래서 특정 집단을 차별할 필요도 없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정당한 울분을 고함 한 번 외치는 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다면,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그 잠재력의 실현을 돕는 데 동참하는 것이 낫다.

라이프스타일 운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운동

한편, 라이프스타일 변화 운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운동들이 있다. 운동의 형태가 개인들의 특정 행위 거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기는 혼동인 듯한데, 가령 불매 운동, 수능(시험) 거부 운동, 병역 거부 운동 등이 있다.

불매 운동은 특정 상품이나 특정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소비자 보이콧이다. 이 운동에는 공정무역 커피 마시기 등 일상 생활의 일부를 바꾸자는 운동도 있지만, 특정 기업 노동자들의 집단행동과 맞물려 연대 제공의 의미로 호소되는 운동도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여름 내내 이어진 롯데호텔 파업 때 롯데 상품 불매 운동이 있었다. 이는 일상 생활 방식을 바꾸자는

운동이 아니었다. 물론 불매 운동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약한 면이 있지만, 사회주의자도 지지할 때가 있다.

수능 거부 운동은 경쟁적 입시 제도에 대한 거부 운동이다. 수능은 청소년과 수험생에게는 일상의 큰 부분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라이프스타일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제도 반대 운동은 그 운동을 뒷받침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가 관건이다. 그 힘이 크고 당사자들의 자신감이 충만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다(광범한 대중이 그렇게 못할 때는 효과가 거의 없겠지만).

병역 거부는 법률적 의무 이행에 대한 거부이다. 주로는 여호와의 증인 신

도들에 해당한다. 이 운동도 힘의 크기가 중요하데, 1960년대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사회주의자들이 징집 거부 운동을 때로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요컨대, 이런 운동들의 일부 참가자들은 라이프스타일 변화 추구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운동들 자체가 라이프스타일 변화 운동인 것은 아니다.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면 라이프스타일(일상 생활 방식)의 뜻이 지나치게 확장돼서 그 개념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더욱이 그런 운동들을 종파적으로 대하는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11월 26일 끝났다.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분회)과 비정규직(민들레분회)이 함께 공동파업을 벌였다. 자회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과 복지 회복 등이 핵심 요구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20일부터 1주일간 더 파업을 했다.

문재인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말로는 정규직화한다면서 실제로는 또 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한 자회사 방안을 추진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와 인력 충원 문제 등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하나같이 약속을 어기고 후퇴했다. 심지어 의료 영리화 등 박근혜가 하려던 규제 완화를 이어받아 추진해 실망과 환멸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이간질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고군분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파업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형 사업장 정규직이 파업을 벌인 주목할 사례다.

서울대병원 사측과 정부는 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의식해 자회사 추진 일정을 뒤로 미룬 듯하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잠정합의안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 합의 이전에 일방 추진하지 않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의 가능성을 보여 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기로 약속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측이 자회사 방안을 완전히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파업에 참가한 적잖은 노동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자회사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를 완전히 철회시키려면 더 광범하고 강력한 투쟁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상급단체가 그에 걸맞은 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정규직 노조는 이번에 임금과 복지 개선을 따냈다. 임상시험 연구코디 분리직군 폐지, 인력 24명 충원, 빼앗긴

휴일 일부 회복 등을 약속 받았다.

이는 일부 개선 효과가 있다. 일부 직종의 경우는 중요한 성취를 이뤘다고 여긴다. 그러나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노동자들도 적잖은 듯하다.

대차대조표

특히 간호 인력 충원이 기대에 많지 못 미친다.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의 노동강도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면 훨씬 많은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다른 대학병원의 경우 야간근무 일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회복을 위한 휴일(리커버리 오프)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간절

한 요구도 얻어내지 못했다.

(교대 근무가 아닌) 통상근무를 하는 다른 직종 노동자들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과 노동강도가 악화할 것을 우려했는데, 이 점에서도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간호사들은 그동안 교대 근무자라는 이유로 휴일수당도 못 받아 왔다. 법정공휴일과 명절에만 주면 휴일수당을 노동절에도 주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런 점을 때문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에서 4분의 1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

수 노동자들이 더한층 조건 개선을 원했음을 보여 준다.

파업 동력은 일주일일 다 되도록 전혀 줄지 않았다. 일부 병동은 하루 이를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래서 파업 종료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노동자들도 제법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에게는 더 나은 성과를 얻을 힘이 있다. 지난 한두 해 사이에 젊은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늘어나는 등 그 힘도 커졌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다음 투쟁에서는 더 전진하길 바란다.

장호중

프랑스

30만 '노란 조끼' 시위, 중도파 대통령을 타격하다

11월 25일 프랑스 전역 2000여 곳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 거의 30만 명이 도로를 점거하며 격렬하게 싸웠다. 프랑스 정부는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탄압했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극단적 중도파”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한 발 물러설 것을 시사했다.

프랑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형광 노란 조끼를 차량에 구비해 놓아야 한다. 시위 참가자들이 그 형광 노란 조끼를 착용해 노란 조끼라는 이름이 붙은 이 운동은 처음에는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일어났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1년 동안 경유 유류세를 23퍼센트, 휘발유 유류세를 15퍼센트 인상했다.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면서 말이다.

프랑스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교외 지역일수록 더욱 그렇다. 특히 트럭·택시 운전사들이 유류세 인상에 타격을 입었다. 프랑스 차량의 60퍼센트가 경유차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에 소득 상위 1퍼센트에 대한 세금이 인하돼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노란 조끼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우리 돈 퍼다가 부자들 주냐”이다.

11월 중순에 트럭·택시·사설구급차 운전사 등의 SNS 호소로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은 마크롱의 노동계급 공격에 대한 더 광범한 분노를 담고 있다. 노란 조끼 운동은 마크롱 정부 내내 이어진 각종 저항의 연장선에 있는 운동이다.

프랑스 동남부에 위치한 까드네에서 도로 점거에 참가한 시위대는 이렇게 말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힘 없고 땀 없는 우리들은 열심히 사는데도 게으르다는 편견을 듣습니다.”

극우의 시위?

언론은 시위대 일부가 보인 성차별적·인종차별적 행동을 전체의 일인양 호도했다.

또, 서민층이 주된 참가자인 노란 조끼 운동의 초기에는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최근에 당명을 국민연합으로 바꿨다)이 지지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프랑스 정부는 노란 조끼 운동이 극우의 운동인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운동이 전개될수록 성차별·인종차별은 약해지고 노동계급적 색채는 짙어졌다.

노란 조끼 운동 조직자들은 성명을 발표해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원한다면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피부색, 출신 나라, 성적 지향, 성별, 종교 모두 상관없다.

“노란 조끼는 민족주의나 파시스트의 순한 양이 아니다.”

11월 25일에는 성차별과 성폭행에 반대하는, 주로 여성이 참가자인 대규모 집회도 열렸다. 노란 조끼 시위대와 여성 시위대는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다.

조직 노동자들도 점점 노란 조끼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11월 23일 프랑스 북부에서 파업 중이던 아마존 노동자들은 노란 조끼 시위에 참가했다.

정유 업체 토탈의 파업 노동자들도 빨간색 노조 조끼를 입고 노란 조끼 시

위대와 함께 도로를 봉쇄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이번 주말에 전국 다발 집회를 예고했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은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몇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다. 첫째, 문재인은 마크롱에게 크게 일체감을 표했는데, 그런 신자유주의적 “극단적 중도파”는 기후변화 대처 같은 명분을 내세우며 노동계급과 서민을 공격하는 위선을 띤다. 둘째, 저항과 투쟁은 비록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투쟁을 위한 좋은 토대를 남긴다. 셋째, 중도파의 배신으로 말미암은 대중의 반감을 극우가 이용하려 한다. 넷째, 그러므로 좌파와 노동운동의 구실이 중요하다.

차승일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 ★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촉구는 부적절!
- ★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 ★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 있다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wspaper.org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필요하시다면)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약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산업의 이윤을 위한 안전 규제 완화가 주된 내용이다. 규제프리존법, 규제샌드박스법, 개인의료정보 상용화, 체외진단기기 안전성 평가 면제 등 숨 가쁘게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한 묶음이다. 악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혁신의료기기법’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의료기기를 ‘혁신’ 또는 ‘첨단’ 의료기기로 지정해, 안전성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한다. 우선 시판을 허용해 환자들에게 사용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안정성 평가를 받은 새 의료기술 중 39퍼센트가 탈락해 시장에 나오지 못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의료기술들도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건강보험도 적용한다니 재정 지원도 받는 셈이다. 그 피해와 막대한 비용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은 의료 영리화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이 의료 영리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에 항의하고 있다

환자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이 모든 게 합법이니 기업은 책임질 일이 없다. 신제품에 대한 현행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이 스스로 기준과 규격을 설정해 제조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심사특례’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할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신속처리’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선 허가-후 규제’한다. 제약 기업이 오랜 시간과 큰 비

용을 들여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약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 준다.

명분도 어처구니가 없다. “첨단재생의료는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직접 환자들에게 시험하겠다는 것이다! 동물 실험이 의미가 없으면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텐데, 거꾸로 곧바로 일단 사람들에게 사용해 보겠다는.

현행법도 일부 약을 안정성 검증 없이 시판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이렇게 시판된 23개 약에 대해 1500건 넘는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 2016년에는 5명이 사망한 일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더 많은 약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독소는 제외했다고 거짓말했었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률을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여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원격 의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상태다. 여야 이견이 없으므로 법안 제출에서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운동이 이 약법들이 통과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에 훨씬 가속이 붙을 것이다.

김재현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1월 27일에 ‘차별 철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교 비정규직 6대 차별 의제를 밝히며 지역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쟁은 지난 1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맺은 집단 임금교섭안의 부족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문재인이 약속한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수준 보장을 위해, 올해 기본급 5퍼센트 인상, 근속수당 5000원 인상,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지

급 등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노동자 3만여 명은 11월 10일 전국 총상경 집회를 열었고, 이후 각 교육청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정부와 교육청들에 항의했다.

그런데 교육청들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기본급 2.6퍼센트 인상 외에 어떠한 것도 불가하다며 버텼다. 이는 올해 초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동결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맞춰 교통비 6만 원을 2019년 기본급에 포함시키겠다는 개악안까지 제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임금 집단교섭에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했고, 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 대책을 마련하

기로 한 약속을 내팽개쳤다.

지난 15일 연대회의와 교육청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해 임금 집단교섭을 타결했다. 기본급은 사실상 동결(올 초부터 적용한 2.6퍼센트 인상)이고, 근속수당은 노조 요구의 절반 수준인 2500원 인상으로 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연 60만 원인 정기상여금을 90만 원으로 인상·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외 요구안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내년 임금교섭으로 넘어갔다).

교육부의 책임 회피와 교육청들의 동결 압박, 심지어 일부 개악안까지 제시하는 상황을 볼 때 만만치 않은 조건이기는 했다. 그럼에도 타결안은 노동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내

용”이라고 평했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예년의 임금 인상률을 100으로 봤을 때 80 수준이다. 연대회의의 요구안에 비해서는 30~40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 교섭을 보완하려고 지역별로 임금·직종 교섭과 단체협약 교섭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육청들이 지역 교섭에서도 주요 요구안들에 대해 “수용 불가”를 외치고 있어 교섭에 별 진척이 없다고 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수준 보장,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전일제 전환,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등 6대 의제를 내걸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부

지역과 직종에서는 직무수당 신설,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같이 필요한 요구들이다.

강원지부는 11월 30일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강원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장애 학생 돌봄 노동자)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특수실무수당 신설과 대체인력 도입 등을 위해 파업한다.

경북지부 돌봄전담사들도 전일제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30일 파업할 계획이다.

서울·대구·전북·제주 지부들도 11월 30일 집중 집회를 하고, 경기지부는 12월 7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 투쟁에 적극 지지·연대하자.

신정환